

#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 (02) 3703-3956 / 전송 (02) 734-9347~8  
사업지원부/ 과장 김석현 사무관 이강영

문서번호 수개 67400-124

시행일자 2000. 6. 14.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취 급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보 존		하	장
부단장	76m		
부 장	김 상 원		
과 장	● 김석현		
기 안	★ 이강영		협 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영월댐관련 물관리정책조정회의 결과 후속조치 지시(국무총리지시 제2000-20호)

1. 수개 67400-116(2000.6.5) 및 119(2000.6.7)호의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개최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영월다목적댐 계획은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물부족, 홍수, 동강지역의 환경보전 및 수물민 지원대책등 영월댐 민간공동조사단이 정부에 건의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과제별 소관기관(영월댐관련 민간공동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6쪽 참조)에서 정밀검토하여 차기 물관리정책조정회의(일정은 별도통보) 1주일전까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영월댐관련 민간공동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1부.

2. 영월댐공동조사보고서 1질(6권). 끝.

## 국 무 총 리

수신처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장관, 산림청장,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지사

寧越댐 關聯  
民間共同調查結果 및 措置計劃

(국무총리 지시 제2000 - 20호)

2000. 6.

國 務 總 理  
水 質 改 善 企 劃 團

# 順 序

## I. 推進經過

## II. 民間共同調查團 調查結論 及 建議

## III. 措置計劃

## ※ 參考資料

## I. 推進經過

- '90.9 漢江大洪水後(영월·단양침수, 일산제방유실, 사망·실종 163명) 寧越다목적댐 건설 추진 중('97.9 댐 건설예정지 指定告示), '98. 3 環境團體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贊反論爭이 장기간 지속
  - 大統領님의 中立的 再調査말씀('99.4.29)과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의 「민간공동조사단」 구성 권고('99.7.6)에 따라 별도의 재조사 실시 방향 결정
- 「민간공동조사단」은 관련부처, 지자체(강원도) 및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專門家 推薦을 받고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분과 34명으로 구성 조사 실시('99.8.26~2000.5.19)
  - 구성 : 위원장(박원훈 전 KIST원장), 물수급(6), 홍수(8), 댐안전(6), 환경(8), 문화(5)
    - \* 추천기관별 구성분포 : 환경단체 등 19, 건교부·환경부 12, 강원도 2
- 「민간공동조사단」은 조사단장 책임하에 5개 分科別 個別調査와 全體會議(10회) 등 8개월 간의 정밀조사를 거쳐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음(2000. 5. 19)
- ※ 「민간공동조사단」이 정부에 제출한 조사결과 및 정부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물관리정책民間委員會」에서 보고 및 논의 과정을 거쳤음(2000.6.2)

## II. 「民間共同調查團」綜合結論 및 建議

### 綜合結論

- 東江유역은 구석기유적·백룡동굴 등 소중한 文化遺産과 그 어느 지역보다 生物種의 多樣性이 풍부하고 독특한 석회암 生態系를 가지고 있어 保存價值가 탁월하므로, 물부족과 홍수 조절 등 심각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寧越多目的댐 建設은 中斷됨이 바람직함.
- 다만, 물 부족과 홍수문제 등에 대한 별도의 補完對策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代案 및 補完對策을 정부에 건의

□ 물 不足 - 2011년 漢江水系는 최대 18.8억톤의 물 부족 예상

\* 당초 정부의 예상치 11억톤보다 7.8억톤이 더 부족

- ① 현재 수력발전댐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천댐등 한강수계의 기존댐들을 用水供給 機能을追加한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연간 4.8억톤의 용수를 추가확보

- 이를 위하여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화천댐, 팔당댐등 한강수계 댐들의 관리권을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韓國水資源公社로 移管하여 물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야함

- ② 정부에서 추진중인 물節約施策(2011년 전국용수절약목표 7.9억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

- 물수요관리(가격정책 7억m<sup>3</sup>, 절수기 및 중수도 보급 확대등 3.9억m<sup>3</sup>)로 10.9억톤까지 용수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수요절감정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음

③ 따라서 정부는 수요절감정책과 아울러 수자원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각종대책 지속추진 필요

- 현재 정부에서 수립중인 水資源長期綜合計劃에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수원개발 등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洪水對策 - 영월과 여주 등 南漢江邊都市 및 首都圈의 홍수조절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대책

① 短期對策으로 남한강변 하천제방의 지속적인 보강과 함께 하천정비 및 內水管理를 철저히 하고, 특히 도시내 內水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거, 우수지 및 배수펌프장등 내수배제 시설 정비

② 長期對策으로 산림정비를 통한 홍수유출량 저감 방안과 함께 영월 및 남한강변의 다른 도시들에 대한 환경친화적 방재도시 개념에 입각한 도시계획의 연차적 추진방안 검토

③ 또한 경제성은 낮지만 환경피해가 비교적 적고 자연생태보존 관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수몰민 보상도 가능한『自然通水式 洪水調節專用댐』건설로 하류충주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검토(규모에 따른 경제성 및 환경영향 신중 검토)

※ 대안검토시 충주댐의 제한수위를 낮추어 홍수조절능력을 증강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용수공급 감소(3~4억톤) 때문에 건의에서는 제외

## □ 環境 및 文化

- ① 환경보존대책이 없는 영월댐 중단은 관광객유인을 위한 난개발로 자칫하면 댐을 건설하는 것 보다 더한 환경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강지역을 『生態系保全地域』으로 지정하고 절대보존지역과 준보존지역으로 나누어 探訪客 制限 및 入場料 徵收 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함
- ② 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기구를 구성하여 自然環境의 保全을 통해 地域經濟가 持續 成長할 수 있는 방안모색

## □ 水沒民 支援對策

- ① 수몰예정지역 주민에게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따른 土地買收 및 補償金을 支給하고 移住시킴
- ② 동강을 자연친화적 生態文化 觀光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으로 이주후 생활대책에 도움

## □ 事前 影響評價의 強化

- ① 영월댐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戰略環境影響評價制度의 導入, 타당성 예비조사시부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계획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環境影響評價法 整備 필요

※ 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위원간 견해차이로 합의된 결론은 없었으나, 영월댐 건설지역이 여타 댐건설지역에 비하여 지진에

의한 위협이 심각하거나 댐하부에 활성화판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음(영월댐 건설 중단 결정으로 안정성문제는 건의에서 제외)

### Ⅲ. 措置計劃(案)

- 「영월다목적댐」의 建設計劃은 白紙化(確定)
- 민간공동조사단이 건의한 各種代案에 대해서는 代案別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妥當性 및 추진방안등을 精密檢討 후 次期 「물管理政策調整委員會」에서 논의 결정(소관기관별로 검토안 보고)



## 建議된 代案別 檢討課題

分 野	建 議 된 代 案	檢討 主管部處 (協助部處)
물 需 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수계 수력발전 댐의 다목적댐화 및 수자원공사로 관리 일원화</li> <li>○ 물절약 시책의 지속실시 및 범국민운동 전개</li> <li>○ 새로운 수원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li> </ul>	건교부·산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건교부
洪水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방보강 및 침수방지시설 정비 등</li> <li>○ 산림정비를 통한 홍수유출량 저감</li> <li>○ 방재도시 개념에 입각한 도시계획 추진 검토</li> <li>○ 자연통수식 홍수조절댐 건설방안 검토</li> </ul>	건교부·행자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산림청(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건교부·행자부 건교부·환경부
環境 및 文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행정적 조치</li> <li>○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li> </ul>	환경부(강원도) 강원도 (환경부, 문광부)
住民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매수, 보상금지급 및 주민 이주</li> <li>○ 자연친화적 생태·문화관광 발전에 수물민을 참여 지원하는 방안 등</li> </ul>	환경부 (기획예산처, 강원도) 문광부·강원도
事前影響評價 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정비</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민간공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서에서 건 소관기관별 의한 소관별 검토사항</li> </ul>	